



통일부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이경화
중앙대학교

제1장 서론	1
제2장 개념 정립과 분석틀	7
제3장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개념과 인식	11
제4장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수단의 운용	16
제5장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의 운용 방향	27
제6장 결론 및 우리의 대응책	36
[참고문헌]	40

표 목차

<표 4-1> 김정은 정권의 통일 전략 관련 가용수단 운용	17
<표 5-1> 통일관련 노동신문 주요 기사(2012-2013년)	29
<표 5-2> 2014년 통일 관련 노동신문 주요 기사	30
<표 5-3> 2015년 통일 관련 노동신문 주요 기사	31
<표 5-4> 제7차 당대회 이후 각계각층의 담화 발표 목록	34
<표 5-5> 전략의 운용 유형: 앙드레 보프의 조율	35

그림 목차

<그림 2-1> 논문의 분석틀	11
<그림 3-1> 국가안보전략과 통일전략 개념	12

요 약 문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다양한 통일 관련 논조를 쏟아내었다. 그동안 북한은 통일전략을 포함한 당규약을 수정하지 않은 채 1980년대에 포함된 전 한반도 공산주의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제7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당규약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통일전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부 내용이 조금씩 변모해왔다.

김정은이 선대의 통일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체제정통성이 선대에서부터 지속된 통일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시대를 알리는 당대회를 통해 대내외에 새로운 통일노선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기존 통일노선에 대한 답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통일 환경은 김정일 정권 시기와 달리 새롭게 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었으며 3대 세습 이후 북한의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에도 급박하다. 북한은 내부안보와 경제, 대외안보전략을 위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고립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몇 가지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5년 8월 15일을 중심으로 평양시를 제정하여 남북의 시간적 이질화를 조장하였으며 남한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례적인 행태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으로 인한 열악한 국제정세, 남북관계의 경색 등 북한 통일 환경의 악화는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분리되어 공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것이라는 전략의 변화를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핵을 지닌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체제보장을 얻고, 분단을 고착화하여 오히려 통일을 외면하고 홀로 가는 전략을 택한다면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전략을 가정할 수도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이러한 자산을 활용해 통일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즉, 한반도 적화통일에 대한 물리적 수단의 확대에 의해 통일전략이 오히려 공세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통일전략은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과 핵을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이 확고해지면서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핵’이라는 자산이 공고화됨으로써 이것이 통일전략의 다른 자산과 전략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핵을 중심으로 한 자산의 운용은 북한의 통일 최종목적을 대남적화통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용어 : 북한의 통일정책, 연방제,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 북한통일전략, 북한통일담론, 한반도통일, 대북정책, 두 개의 조선론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북한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다양한 통일 관련 논조를 쏟아내었다. 그동안 북한은 통일전략을 포함한 당규약을 수정하지 않은 채 1980년대에 포함된 전 한반도 공산주의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제7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당규약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의 통일전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서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허부 내용이 조금씩 변모해왔다.

김정은이 선대의 통일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체제정통성이 선대에서부터 지속된 통일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시대를 알리는 당대회를 통해 대내외에 새로운 통일노선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기존 통일노선에 대한 답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¹⁾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통일 환경은 김정일 정권 시기와 달리 새롭게 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었으며 3대 세습 이후 북한의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에도 급박하다. 북한은 내부안보와 경제, 대외안보전략을 위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고립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몇 가지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5년 8월 15일을 중심으로 평양시를 제정하여 남북의 시간적 이질화를 조장하였으며 남한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례적인 행태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으로 인한 열악한 국제정세, 남북관계의 경색 등 북한 통일 환경의 악화는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분리되어 공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을 것이라는 전략의 변화를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핵을 지닌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체제보장을 얻고, 분단을 고착화하여 오히려 통일을 외면하고 홀로 가는 전략을 택한다면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전략을 가정할 수도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이러한

1) 통일전략과 관련하여 수정해야 하는 당 규약 내용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의 부분이다.

자산을 활용해 통일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즉, 한반도 적화통일에 대한 물리적 수단의 확대에 의해 통일전략이 오히려 공세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김정은 정권이 통일전략에서 일대 전환을 선택했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선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바꾸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우리와 분리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전략적 방향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은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북한이 새로운 통일노선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통일을 주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세적으로 변하였는가?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통일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검토

북한의 통일전략에 대한 연구는 적화통일에서 수세적 통일전략, 현재 제기되고 있는 두 개의 조선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1990년대 이전의 북한 통일 전략 연구에서 북한이 적화통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1990년대 냉전 이후로는 북한의 통일전략이 상당히 수세적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이 제시되었다. 현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두 개의 조선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관점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1. 북한의 양면전술에 따른 통일전략 연구

북한의 통일전략 또는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겪어왔다. 1980년대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적화통일로 규정하였고 위장통일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았으며²⁾ 1990년대에는 북한이 대내적 대외적으로 수세적 입장에 처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적 변화가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로 나타났다고 보았으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1990년대 이후에도 북한의 적화통일 의도를 주장한 연구가 있다. 박한식은 북한의 사상인 주체사상의 존재근거가 혁명에 있으므로 남조선해방을 통한 공산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즉,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내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 공산화통일은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체제목적이

2)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일관성 있고 경직되어 있으며 통일된 조국의 잠재적 체제로서의 정통성 지위를 주장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북한은 열등적 위치를 극복해 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경직된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³⁾

기존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통일정책이 표리부동하다는데 주목하였다. 북한의 통일담론 및 정책과 실제로 추진하는 전략에서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정책과 전략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북한의 변화와 수세적 전략

두 번째로, 북한의 통일전략이 점차적으로 수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통일방안 분석에 대해 집중되어 있으며 김정일 정권의 통일 정책 및 전략,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에서 주로 제기된다. 아직까지 김정은 정권의 통일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이 김정일 정권의 통일전략을 당분간 답습하고 있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배영애는 탈냉전기 이후 대내외 환경요인에 따른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외 관계가 악화되고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공세적 태도에서 수세적인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즉, 대내외 환경악화로 인해 김정일 정권은 정치적 완전통일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회피하고 있다고 보았다.⁴⁾

최완규와 이수훈 역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에 미치는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였음을 주목하였다.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체제가 변모하였으며 남북한의 국내 상황도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 변화가 북한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끼쳐 과거의 전쟁 또는 혁명 및 공세적 연방전략과는 달리 남북한이 사실상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고 남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였다고 보았다.⁵⁾ 통일전략에서는 제도의 통일보다 민족의 통일을 강조하여 김일성 시대 체제 수호적 공존 통일전략을 제도화하는 시도로 보았다.

3) 박한식,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외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편,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서울: 어문각, 1990). pp. 63-64.

4) 배영애,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통일전략』 7(1) 2007, pp. 289-320.

5) 최완규·이수훈, “김정일 정권의 통일정책”, 『통일문제연구』 통권 236호, 2001. pp. 163-170.

고병철은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공화국안이 1984년 전두환 정권과 대화의도를 표시함으로써 선전차원이 아닌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자리잡았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북한의 통일전략이 연방전략에서 혁명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로써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적화통일을 염두에 둔 일방적 통일이 아닌 남북동등원칙에 기초한 통일로 전환하였다고 보았다.⁶⁾

박영자는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 이후 상당히 수세적이고 체제방어적인 통일전략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 시대에 부각된 민족공조론, 즉 우리민족끼리에 기반한 통일논의를 통해 선공존 후통일 전략을 지속하여 수단으로써 민족공조를 강조하여 미국에 의한 안보위기 해결, 외부지원에 의한 경제난 해소, 친북 우호세력 강화의 목표를 얻어내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⁷⁾

3. 분리공존 전략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통일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는 두 개 조선 전략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증거는 아직까지 단편적인 수준이다.

다만,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사실상의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고 남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한 것으로 본 시각이 있다.⁸⁾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지속되지 않은 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의 공통성을 찾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완규와 이수훈은 북한의 통일전략이 북한의 의지보다는 남한사회의 변화와 남한의 태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았는데 남한의 정치상황이 불안해지면 공격적이고 혁명적 정책을, 남한의 정치 사회 상황이 안정되고 정통성이 확고해지면 수동적 정책을 견지했다고 보았다.⁹⁾

김근식과 조성렬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평양시간을 표준시로 변경한 것으로 남한과 30분간의 시차를 두어 민족의 이질성 심화를 염두에 두어 유도한 것, 또한 김정은 정권 이후 남한에 대해 대한민국으로 표기한 점, 또한 민족공조의 표현이 줄어들고 강성국가 및 애국 등의 담론이 증가한 것은 국가차원의 담론이 발생하는 것을 들었으며 결국 북한이 현실적으로 3대혁명역량

6) 고병철,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계간사상』 1991년 봄호, p. 106.

7) 박영자, “김정일시대 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2010), pp. 216-240.

8) 최완규·이수훈, “김정일 정권의 통일정책: 지속성과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5호 (평화문제연구소, 2001), p. 162.

9) 위의 책, pp. 179-180.

이 쇠퇴하자 체제유지를 위해 두 개의 조선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경희는 이러한 연구를 심화확대하여 김정은 정권의 두 개 조선 전략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왔으며 이러한 전략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의 집권 말기인 1991년부터 북한의 통일정책은 ‘두 개 조선’전략으로 선회된 것이며 그 기원에는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냉전 이후 수세적인 정책을 두 개의 조선으로 해석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¹⁰⁾

조성렬은 “북한 정권의 3대혁명역량이 모두 쇠퇴하자 사실상 두 개의 조선 전략을 활용해 남북한 상호 인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3대혁명역량이 이러한 전략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 자체의 힘을 기르고 남한 공산화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만들며, 북한의 도움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역량이 쇠퇴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이 하나의 조선을 목표로 하였으나 김정일 정권 시기 국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로 국제혁명역량이 소멸되었고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남한혁명 역량마저 쇠퇴하게 되어 북한이 더 이상 하나의 조선 전략을 추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제기하였다.¹¹⁾

김근식은 같은 두 개의 조선 전략을 주장하면서도 조성렬과 조금 다른 배경을 주장한다. 북한이 두 개의 조선 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은 김정은이 김정일에 비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인덕은 북한이 2015년 8월 15일에 평양시간을 제정한 것은 예사롭지 않게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김정은과 호네커를 비교하였는데, 동독이 1968년 이후 동서독 간 국력차가 심화되자 호네커가 두 개의 독일 정책으로 선회한 것을 김정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서울과 다른 평양시간이라는 표준시를 설정한 것과 8.25 남북접촉에서 남한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은이 이러한 두 개의 별개 국가로 생각하는 바탕위에서 체제 방어 전략을 세우려는 것으로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으로 독일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

10) 최경희 박사 회의 발표 내용, 2016. 8. 20.

11) “북한은 두 개의 조선 원한다”. RFA 2015년 12월 24일.

그리고 휴전선이 국경선이 되는 것 등을 언급하였다.¹²⁾

김동엽은 북한이 201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문 국호를 Korea에서 Corea로 고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하였다.¹³⁾ 그는 앞서 제시된 주장과 마찬가지로 목함지뢰 사건 이후 2015년 8월 22일 남북회담에서 <조선중앙통신>이 “대한미국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남한에 대한 존중과 긴장상태 완화에 의지”라고 분석하였다.

김보근은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두 개의 조선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2014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사망이 두 코리아 정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개의 조선 정책의 핵심은 대남사업을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이 맡아서 한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더욱 많은 대남관계 성명들이 외무성을 통해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향후 통일이라는 담론에서 ‘두 개의 조선’ 윤곽이 더욱 자세하게 드러날 것이며 통일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제시되어 온 주민들의 충격이 완화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⁴⁾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김정은의 통일전략이 선대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논조에 대한 분석을 주방법으로 하였다. 북한이 매일 발표하고 있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또는 언론 보도 내용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의 공식 신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이 내놓는 담론과 북한의 실제 의도에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6.25 전쟁 직후 적화통일 의도를 감추기 위해 남한에 대한 평화공세를 통해 이중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북한의 인쇄물이 김정은 개인의 실제 전략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북한 권력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김정은이 현지도도를 하면서 한 연설이나 주요 간부들과 나눈 담화 등 북한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접할 수도 있는 많은 논조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12) “김정은 두 개의 독일 지향했던 호네커 닮아가는 듯”, 『조선일보』 2015년 10월 3일자.

13) 북한의 2016년 4월 최고인민회의 결과 이러한 명칭 변화는 없었다.

14) “Korea를 Corea로 북, 국가 영문명 바꾸나” 『한겨레』, 2015년 1월 7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식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의 일차 자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통일 논조를 살펴보고 통일 전략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북한이 대내외에 전달하려는 전략과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시기 및 대상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북한 논조를 중심으로 한다. 분석 방법은 전략의 하부 개념인 최종목적과 수단의 상호작용 및 이에 대한 조율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지 5년이 되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의 통일전략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집권 안정화를 대내외에 선전하는 제7차 당대회를 치러냈고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행보가 장기 국가전략을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보았을 때, 향후 연구 방향의 초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은 정권의 집권 5년은 향후 김정은이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정권 안정화를 공고히 하는 단기 전략 기간이 될 수 있다.¹⁵⁾

북한의 통일전략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마지막에는 우리 정부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차곡차곡 쌓인다면 북한의 장기적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로드맵을 그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제2장 개념 정립과 분석틀

제1절 전략의 개념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전략

-
- 15) 박영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김정은의 장기집권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김정은 집권 5년 이내인 2012년부터 2016년을 김정은 권력 공고화를 유리하게 만드는 단기 전략 기간으로 상정하였다. 본 논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이 김정은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장기 전략으로 향한 단기 전략으로 분석하였다. 박영자, “5차 핵실험, 김정은 장기집권 전략에 따른 행보,”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6년 9월 13일자.
- 16)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일담론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오경섭·이경화,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6)”을 참조, 본 연구는 위 연구의 정성적 분석 일부분을 활용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란 목적과 방법 및 수단 사이의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전략은 일반적으로 “수단과 목표를 연계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전략이란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서 취하는 어떠한 선택을 의미한다. 수단과 목표를 연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창조적 행위를 전략으로 보는 것이다.¹⁸⁾ 전략에는 수단을 운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¹⁹⁾

전략이란 “최종목적과 방법,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조율을 하는 술(Art)”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개념은 아서 리케에 의해 정립되었다. 구체적으로 리케는 “전략이란 최종목적 또는 목표, 방법 또는 개념, 수단 또는 자산으로 이루어진 틀”로 규정하였다. 본래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제안되어 사용되었던 개념이 전략의 기본 틀로 널리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다.²⁰⁾

리케 외에도 전략적 개념은 유사한 하위 개념을 중심으로 정립되었다. 바렛은 전략 개념이 최종목적, 수단 또는 도구, 위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요소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으로 보았다.²¹⁾ 그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단절적 상태가 아니며 순환주기를 통해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안보전략은 외부 요소인 안보환경과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거치는 복잡한 과정임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전략은 최종목적, 수단, 방법(또는 위험) 등 하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순환주기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제2절 전략의 구성요소

전략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은 최종목적, 방법, 수단 또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조율’하는 술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요 개념을 북한의 통일전략에 대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7) 로렌스 프리드먼, 『전략의 역사 1』,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4, p. 8.

18) David Jablonsky, “National Power” in Joseph Cerami and James Halcomn (Ed.) *The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National Security* (4ed.) Vol. 1: Theory of War and Strategy, (New York: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0), p. 89.

19) 박창희,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국가전략』, 제17권 3호 (2011), pp. 44-45.

20) 위의 논문, pp. 66-67.

21) Henry C. Barlett, G. Paul Holman Jr. and Timothy E. Somes, “The Art of Strategy and Force Planning” in *Strategy and Force Planning*, (New York: Naval War College, 2004), p. 14.

1. 최종 목적(end)

전략의 개념에서 최상위 구성요인 중 최종목적과 목표를 둘 중 택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것은 최종목적과 목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란 최종 목적을 보호하고 증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대상이다.²²⁾ 북한의 통일전략에서 최상위 구성요인은 목표보다는 최종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통일전략에서 목표를 상정한다면 통일 또는 체제 생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보다는 북한이 추구하는 마지막 상태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통일전략에서 최종목표는 북한이 그동안 줄곧 주장한 바와 같이 남조선의 ‘적화통일’이 될 수 있으며 통일 지연, 통일이 아닌 ‘공존’도 최종목표가 될 수 있다.

2. 수단(means)과 방법(way)

수단이란 최종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의미하며 인적자원, 물적자원 및 심리적, 정치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을 운용가능한 수단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단지 자원이 많다고 해서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용가능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에는 정치, 경제, 인력, 과학술, 군사, 리더십 등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과학술은 첨단과학술, 군사무기, 장비 등 물리적 요소들을 포괄한다. 그러나 과학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가용수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치, 외교, 국민적 단결에 따라 가용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방법이란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운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다. ‘전략적 접근 대안들 중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주기에 따른 방법의 선택에 지배를 받게 되며 관료주의적이고 행정적인 수직문화와 전통으로 의견 수립이 불가능함으로써 방법 선택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북한의 통일전략에서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인지배 하에 있으므로 자원의 가용은 지도자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된다. 즉, 북한은 재원을 군사에 투입할 수 있고, 정권에 의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자원의 가용 수준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 따라서 ‘방법’의 선택 또한 이러한 구조

22) 김훈상, 『Ends, Ways, Means 패러다임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지식과감성, 2012), p. 101.

하에서 이루어진다. 일인지배하의 북한은 지도자가 자원의 가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방법 선택의 제약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3. 조율(adaption)

최종목적과 수단과 방법은 상호작용을 한다. 이들 사이는 항상 조정 과정이 있다. 만약 어떠한 전략 자원이 증가하게 된다면 전략을 수행하는 자신감이 확대될 것이며 또는 만약 상대가 존재하는 전략관계(전쟁 등)에서 상대가 약화된다면 최종 목적을 확대하거나 앞당기려 시도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의 전략 자원이 확대되거나 능력이 향상된다면 전략은 이에 맞추어 축소될 수 있다.

시간과 창의력, 결정을 기반으로 수단은 많은 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목적 자체가 수단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전쟁을 예로 들면 전쟁은 대중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전쟁이 더욱 확산되게 하기 위해 폭력에 의해 생성된 감정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희생과 노력을 쏟게 할 수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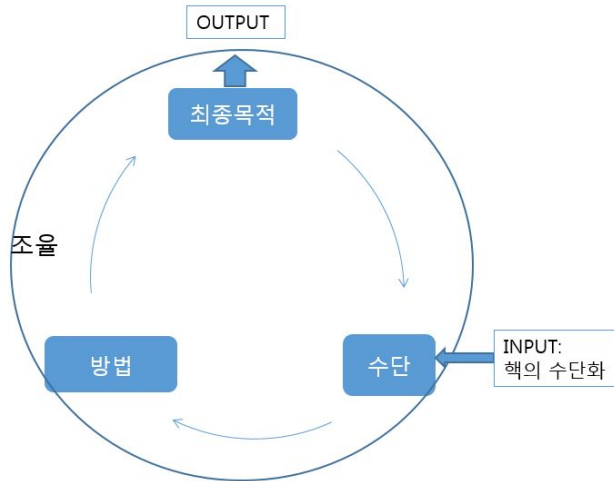
이러한 조율 과정을 북한에 대입할 수 있다. 북한에 전략 자원이 증가함으로써 전략 수행의 자신감이 확대될 것이며, 최종 목적을 뚜렷이 하거나 앞당기려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자원을 핵으로 초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논문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통일전략 수단 운용이다. 북한의 통일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은 북한의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자원, 첨단 과학, 인력 등이다. 본 고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수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핵이라는 획기적인 수단²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 통일전략의 최종목적과 수단운용이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졌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의 전략적 활용 이후의 수단 운용은 ‘심리적’ 또는 ‘정치적’ 수단을 확대하여 가용하고 있음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23) US Marine Corps, “Strategy: Ends and Means”, *Marine Corps Doctrinal Publication*, Vol. 1-1 (1997), pp. 51-52.

24) 전략 연구에서 핵은 전략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첨단과학술의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림 2-1> 논문의 분석틀

제3장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개념과 인식

제1절 북한 통일전략의 개념 설정

전략의 개념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북한의 통일전략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연구에서 북한의 통일전략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통일정책과 혼용하기 쉽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협소한 개념으로 보면, 오로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에 한정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제반 요소와 연계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국가안보전략과 맞닿아 있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제반 요건들을 포함해 분석하는데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통일전략을 국가안보전략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큰 부분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략을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된 커다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의 안보주체가 국민이 아니며, 국가이익도 한정된 주체에 한정되어 따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전략으로 구분되는 것은 국가안보전략이다. 국가안보의 개념은 국가라는 주체, 국가이익의 객체, 국내외로부터의 위협으로 구성된다.²⁵⁾

25) 정준호, 『국가유형별 안보론적 해석에 관하여』, (서울: 국방대학원, 1990), pp. 3-6.

여기서 안보주체는 국가이익 및 목표를 결정하며 국가이익을 해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하위 제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북한의 안보주체는 최고지도자이며 국가객체 또한 체제생존으로 되어있다. 북한 또는 북한안보는 일인정권 차원의 기본 체계를 지닌 것이다.²⁶⁾ 따라서 북한의 핵심적 이익은 수령 일인지배체제의 보존, 사회주의체제의 완전한 승리, 남북통일 및 경제적 번영 등으로 볼 수 있다.²⁷⁾



<그림 3-1> 국가안보전략과 통일전략 개념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한 내부 위협과 외부 위협이다. 북한은 북한 안보 위협의 제거를 위해 이데올로기 도구, 주체사상을 통해 집단 내 정치적,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통합과 일체성을 유지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대남무력적화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대내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

대외적 안보위협은 한국 및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국가들에 있다. 그 중 북한은 한국을 무력적화통일의 대상이자 직접적 위협세력으로 미국은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직접적 위협세력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26) 정영태, “북한의 국가전략과 핵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20주년 기념논문집』, (2007) pp. 79-80.

27) 레빈,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 이홍구,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80년대의 대외적응』, (서울: 법문사, 1986), pp. 285-286.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안보전략목표는 대남적화통일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오랫동안 한국을 타도하고 정복할 수 있는 독자적 역량 개발, 한미동맹관계의 약화와 주한미군철수 및 유엔사 해체 등 정권 안보를 위한 전략목표를 변함없이 추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3대혁명이라는 목표 하에 대남 군사적 적화통일을 위해 상대적 우위의 대남군사능력을 배양을 추진하였고 한국과 미국의 대외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목표를 추진하였다.

즉, 대남 차원의 국가안보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북한은 한국을 한반도 유일정통성 확보를 위한 경쟁자뿐만 아니라 북한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였고 한국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일단 무력통일을 달성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되며 한반도에서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영속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최대 임무로 보는 것도 그러한 연속선상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당면목표의 하나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을 천명함으로써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강하게 표출해 왔다. 북한의 공공연한 대남적화통일 의지 표명은 내부체제 단속을 위한 것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정권과 체제의 보장, 즉 수령유일지배정권의 강화를 위해 대남적화통일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달성을 위한 노력은 군사적 도발과 정치경제적 경쟁 및 군비경쟁 수행이 지적될 수 있다.²⁸⁾ 대남적화를 위한 공격전략 및 군비증강 의지는 유일지배체제의 지속을 위한 북한의 목표 전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미측면에서 북한의 전략은 마찬가지로 무력적화통일 전략 하에서 추진되었다. 남조선 해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개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은 물론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전쟁 상황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작용하였다. 이와 반대의 사례로 베트남전을 통해서는 평화협정체결 이후 미국 철수로 북베트남이 전쟁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북베트남은 미국과 남베트남 갈등을 심화하여 남베트남의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체결로 미군 철수의 귀결로 전쟁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었다.²⁹⁾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 미군철수 요구를 천명해오고 있으며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28) 정영태, “북한의 국가전략과 행정책”, p. 83.

29) 위의 글, pp. 83-84.

제2절 김정은 정권의 현실인식과 새 전략

북한은 2010년 9월 당규약을 개정하면서 당면목적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구절을 그대로 포함하였다. 북한이 국가전략의 목표를 적화통일에 그대로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중심에는 핵이 놓여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국가전략은 강성국가이다. 이는 경제강국과 문명강국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경제발전노선을 선포한데 대해 북한의 경제에 대한 역점, 즉 핵개발에 대해서 북한의 공세성이 아닌 경제건설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³⁰⁾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체제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체제안정을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면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된다.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국 지위 주장은 수단이 아닌 목적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과거 김정일 정권에서 핵을 협상수단화하여 지원을 얻고 미국과의 대화를 얻어내는 데 쓰였다면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핵이 협상수단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선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이 파기되지 않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7차 대회에서 북한은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³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과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였다.

30) 박승지,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 우승지 편저,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p. 111.

31) 『로동신문』 2016. 5. 7.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비핵화는 이미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며 핵선제 불사용과 핵확산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대회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는 것으로 언급되었다.³²⁾ 당 대회 결정서에서는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활적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공업부문에서 병진노선의 요구에 맞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동방의 핵대국”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일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이 생존적 차원에서 사활적 전략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세계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달성될 수 없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은 “2016년의 수소탄 시험은 1950년에 시작된 전쟁의 계속”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력 증강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전쟁종결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³³⁾

이처럼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상당하다. 북한은 체제 수호와 안정을 위한 전략 수단으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핵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통일전략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북한은 2016년 3월 이후 핵무기에 대해 ‘주체탄’ 또는 ‘통일탄’³⁴⁾이라고 언급하며 ‘주체의 핵보검’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⁵⁾ 이는 북한의 통일전략이 상당히 공세화 되어가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2016년 4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의 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전쟁을 억제하는 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며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의 정당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우리의 핵보유는 무슨 위협이 아니라 미국이 몰아오는 핵 참화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방도는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라고 주장하였다.³⁶⁾

32) 북한은 2016년 9월 9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6. 9. 9.

33) 『조선신보』 2016. 1. 17.

34) 2016년 3월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 땅덩어리를 마음대로 두들겨 팽수 있는 최첨단 공격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며 강위력한 주체탄, 통일탄을 쏠 수 있는 로동당시대 주체무기들을 부단히 개발완성하여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2016. 3. 7.

35) 북한이 주체의 핵보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16년 3월 9일; 2016년 3월 16일자 노동신문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36) 『조선중앙통신』 2016. 4. 16.

북한의 핵능력은 실제 전쟁수행능력과 위협으로 존재하며 북핵이 방어용으로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논의가 우세하다.³⁷⁾ 북한은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협의 1차 대상은 한국이 된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개발로 인해 핵전쟁이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북한의 핵전략은 북한의 대남 핵사용 의지와 선택 상황에 따라 핵공갈과 전술적 핵사용, 전략적 핵사용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핵공갈을 확대하였다. 구두나 선언을 통해 고의적으로 정보 유출을 하여 단기적으로 안보를 담보받는 것이다. 북한의 전면적 도발 초기에는 핵공갈을 통해 남한의 전쟁 의지를 후퇴할 수 있으며 전쟁이 진행된다면 주요 군사시설의 파괴에서 대남 전면적 도발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 전면 전 도발시 ‘조속한 전쟁 승리와 한반도 적화’의 공세적 목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전략적 목적으로 핵사용을 결합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을 대남적화통일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이러한 핵전쟁 가능성을 실제적인 것으로 보고 위협을 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핵보유와 핵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북한이 ‘전략’ 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가용수단과 방법, 조율의 변화로 인해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일전략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4장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수단의 운용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 과정에는 수단과 방법, 최종목표가 있으며 조율 속에서 상호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통일전략과 관련하여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 관한 공세성과 적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이 통일전략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군사력, 핵능력, 리더십, 경제적 자원 등 북한의 전 자원이다. 북한은 이러한 수단의 가용성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37) 김진무, “북한 핵무장과 국가안보전략”, p. 35.

<표 4-1> 김정은 정권의 통일 전략 관련 가용수단 운용

전략 방향	가용 수단	수단의 가용화 확대방법
대내 및 대남전략	주민 동원의 심리적 수단	민족공조 선전선동
	물리적 수단+심리적 수단	통일전쟁 위협
	정치적 수단	통일에 대한 주도권 강화
대외전략	정치적 수단	대미 위협, 평화협정

제1절 대내 및 대남전략 관련

1. 민족주의를 통한 선전선동

일반적으로 민족공조론은 한반도 문제를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상호 협조하여 해결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었다.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되고 있는 것은 외세, 즉 미국의 개입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남북한 주도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족공조의 논리를 통해 한국의 대북경협 및 지원의 명분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 우리 사회 내에 팽배한 반미 감정에 편승하여 미국을 화해 및 협력의 방해 주범으로 부각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통일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심리적 수단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심리적 수단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민족공조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특히 공식언론에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 등의 단어를 자주 언급하였다.

민족운명의 주인은 민족자신이며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통일위업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나가야 한다.³⁸⁾

이러한 민족자주, 민족공조는 김정일 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김정은은 핵개발 이후 민족자주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며 내용을 강화하였다.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이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은 남과 북을 엄두에 둔 “우리 민족의

38) 『로동신문』, 2014. 3. 14.

전략적 지위”이다. 북한은 남한을 포함한 우리 민족이 예전과는 ‘핵’을 통해 차원이 다른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과거 “제 나라, 제 민족을 지킬 힘이 없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보호와 독립을 구걸하고 해방이 분렬로 이어지는 통한스러운 비극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제 해방 시대로 소급하여 민족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다. 핵을 기반으로 북한은 “강대한 민족으로 극적전환”을 이룩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⁹⁾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⁴⁰⁾

북한은 동 기사에서 이러한 논조로 제7차 당대회의 자주통일대강에 “우리 민족의 전략적 지위”가 새롭게 올라섰으며 이러한 전략적 지위와 “강력한 주체힘”을 바탕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자신들이 새로운 지위에 올라 있으며 강력한 힘이 있으므로 미국이 통일문제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민족자주의 새롭고 참된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다.⁴¹⁾

이러한 배경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통일방안을 더욱 자신감 있게 내걸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방안이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주권 확립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연방제를 통한 북한의 남한 적화통일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민족은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⁴²⁾

위의 논조에서 북한은 남한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공세적인 통일방안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확대되고 있다.

39) 『로동신문』 2016. 6. 11.

40) 『로동신문』 2016. 5. 9.

41) 위의 기사.

42) 『로동신문』 2016. 5. 26.

이와 동시에 핵을 민족의 공동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3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핵은 통일조국의 룡성변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⁴³⁾ 핵을 우위로 한 선군정치와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를 통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통일조선의 국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은 민족의 개념을 남한으로 확대한데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5월 이후로 북한은 ‘태양민족’의 담론을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태양’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민족에도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태양민족이라는 용어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김정은은 통일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민족적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여기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앞당겨오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은 태양민족의 후손들 모두가 심장에 새긴 철의 진리..”

북한의 이러한 선전선동의 내용은 남한과 북한을 통합하여 북한의 정권 하에서 한 민족으로 보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핵을 지닌 새로운 지위로 민족공조론을 내세움으로써 공세적인 민족론을 제시하고 있다.

2. 통일전쟁의 위협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북한 결속을 유도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제도통일 가능성에 대한 견제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방향에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조국통일대전’의 위협이다. 상대를 물리적 힘에 의해 위협하여 위축하려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물리적 수단이 확대되었는가? 이는 북한의 내부결속으로 인한 군사능력 및 핵능력 강화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이 조국통일대전의 위협을 확대하는 것은 대내결속과 대남 위협의 양면전술을 위한 것이다. 우선 대내적으로 군대를 통제하고 전쟁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인민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하자마자 자신의 통일관은

43) 『로동신문』 2013년 2월 13일자 및 2014년 3월 3일자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력통일이며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까지 진격하겠다고 선언하였다.⁴⁴⁾ 2013년에는 3년 내에 혁명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며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조국통일대전은 북한의 국가전략인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와 함께 추구되었다. 2012년에 로동신문에 실린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 동지의 선군령도에 따라 백두산대국의 필승의 기장을 힘있게 떨치며 조국통일대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⁴⁵⁾

김정은 정권에서는 조국통일대전을 주창하며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라는 구호를 사용하였다. 이 구호는 2012년 9월에 처음 등장하였다. 2012년 9월 9일 NLL 일대에 서남전선사령부를 창설하며 서해지역에 전쟁 위협을 강조하면서 통일대전 구호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⁴⁶⁾

이후로 통일대전의 위협은 김정은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와 핵 억제력의 보유, 강성국가 건설과 동반하여 자주 등장하였다. 2013년에는 주요 군사엘리트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한 자리를 소개하며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가진 천하무적의 백두산 혁명강군이 있기에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이 때에 반드시 일떠서게 될 것이다.⁴⁷⁾

김정일의 유훈을 따라 선군정치를 지속해나가면서 통일대전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이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군대를 그 아래 결속하려는 의도이다.⁴⁸⁾

2015년을 완성의 해로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조국통일대전 위협은 2013년이 가장 활발하게 제시되었다. 이후로는 통일대전보다는 비평화적 통일방안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44) 『조선일보』 2014. 3. 26.

45) 『로동신문』 2012. 8. 25.

46) 『데일리엔케이』, 2012. 9. 23.

47) 『로동신문』 2013. 3. 4.

48)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평화적 통일방안은 김일성 정권 당시 통일 방도의 한 축으로 제시된 것이다. 김정일은 남북관계의 확대와 더불어 평화적 통일방안을 주창해왔으나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로는 비평화적 통일방안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⁴⁹⁾

북한의 통일대전에서 구체화된 공격적 논조의 확산은 전쟁연습을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군사적 역량 결집 등을 중심으로 물리적, 심리적 가용수단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3. 통일에 대한 주도권 강화

1) 남한정부 비난 공세

김정은 정권에서 보수 정권의 집권을 통해 남북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에 기인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정부에게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돌리고 비난함으로써 책임의 공을 전가하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후 2012년 정권을 승계한 김정은은 남한에 대해 상당히 공세적이고 비난조의 논조를 지속하였다. 특히 남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주를 이루었다.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역적패당, 반통일 역도, 친미파쇼의 광신자, 악의 원흉’ 등 강도 높은 비난을 하였으며 그 요인으로는 북한이 ‘민족의 대국상’에 처해있는데 ‘전쟁소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가장 최악의 상태’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것은 남한 정부가 ‘외세와 결탁’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⁵⁰⁾

김정일 시기에는 ‘6.15공동선언’이나 ‘민족단결’ ‘자주통일’ 등을 강조하면서 남한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간혹 비난 대상이 등장하더라

49) 북한의 비평화적 통일방안은 2014년 이후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까지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의 통일방안이 강조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2012년 2월 20일자 로동신문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무력행사의 조건이 아니다.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는 달라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련방제 통일은 그 유일한 방도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2014년 4월 24일자 로동신문에서 “체제통일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체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며 그것이 초래할 것은 전쟁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제7차 당대회 이후 2016년 5월 8일자 로동신문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에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두 가지 방법 모두에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50) 『로동신문』 2016. 5. 26.

도 남한 정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⁵¹⁾ ‘반통일분렬주의자’⁵²⁾ 정도로 표현되었다. 통일논조도 선대 정권의 업적 칭송이나 통일의 당위성, 연방제 통일방식의 강조 등 온건하고 일반적인 논조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초기부터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한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에서 정권에 대한 비난조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 ‘민족자주와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하는 사실에서 동시에 남한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⁵³⁾

“남조선집권자가 권력을 잡기 바쁘게 들고나온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는 동족을 그 무슨 변화어로 유도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제도통일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이다. 남조선집권자가 도이쉴란드를 통일의 모델로 내세우면서 제땅도 아닌 그 나라에서 보따리를 풀어헤친 드레즈덴선언 이라는것도 제도통일 흥계의 산물이며 보수패당이 말끝마다 떠벌이는 통일대박론도 본질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통일로 그 무엇을 얻겠다는 용납못한 제도통일론이다.”⁵⁴⁾

“남조선당국은 거레 앞에 다진 공약과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등을 돌려대고 언제 가도 실현 될 수 없는 허황한 제도통일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⁵⁵⁾

김정은 정권에서의 남한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김정일 정권 시대와 달라진 점이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희망을 내비치고 있고,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은 정권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며 미국을 배제하고 우리민족끼리 공동선언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데,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던 김정일 정권에서 한반도에 통일과 번영의 희망이 있었으며 의견이 상이한 부분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역설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⁵⁶⁾

51) 『로동신문』 2007. 6. 4.

52) 『로동신문』 2007. 6. 23.

53) 『로동신문』 2014. 10. 2.

54) 『로동신문』 2016. 1. 13.

55) 『로동신문』 2016. 5. 8.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한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양보를 통해 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 원인이 북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이 대화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부터 지속되었던 당시와 같은 북한에 유리한 남북관계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통일방안에서의 주도성

김정은 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끊임없이 강조해 온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노동신문 2014년 4월 29일자에서는 “련방제통일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며 북과 남의 모든 계급, 계층들과 각당, 각과가 다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하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하며 북한이 선대 정권에서 내놓았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⁵⁷⁾

연방제안은 달라진 통일 환경에서도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통일방식이다. 그 성격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 때마다 의미 있는 변화를 거쳐 왔다. 특히 1980년대 말 이래로 수세적으로 변모되었다고 평가된다.⁵⁸⁾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체제생존을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세적 방향은 김정일 정권에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⁵⁹⁾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하는 남북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식으로 협의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선대의 통일방안의 입장을 계승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의 새로운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중후반부터 2013년도까지 ‘련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그 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던 ‘련방연합제’라는 명칭을 2014년 중후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련방연합제’는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서 서로의 공통성을 인정했다는 데서 통일방안의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표현이다.⁶⁰⁾ 이 표현은 2014년 7월부터

56) 『로동신문』 2012. 6. 5.

57) 『로동신문』 2014. 4. 29.

58) 배영애,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통일전략』, 제7권 제1호, (2007) p. 291.

59) 조만·최대석, “남북한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의 접점”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000-2 (2000), p. 44

12월까지 일시적 기간 동안 자주 등장했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통일방안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은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한다.⁶¹⁾ (강조는 저자)

두 번째로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통일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을 지닌 것으로 선전하였다. 2014년 10월 11자 노동신문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연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 연방국가의 성격과 기능,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임무와 그 호상관계 등 통일국가창립과 관련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고 언급하였다.⁶²⁾ 또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혀준 설계도이다. 이 방안은 ”연방국가의 조직과 구성원칙, 권한분배와 임무, 대외적 지위 등을 북과 남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⁶³⁾

요컨대, 북한은 자신의 통일방안이 연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 연방국가의 성격과 기능, 통일정부와 지역 정부의 임무와 관계를 확정하였으며 그 조직과 구성원칙, 권한분배와 임무, 대외적 지위 등 실질적 내용까지 정했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방안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향후 김정은은 북한의 연방제를 구체화하여 선전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60) 이에 대한 논의는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p. 379-394를 참조.

61) 『로동신문』, 2014. 7. 7.

62)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로동신문』, 2014.10.11.

63) 위의 기사.

제2절 대외전략 관련

1. 대미 위협

미국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은 당 대회 이후 미국에 제기한 공개서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였다.⁶⁴⁾

첫째,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이 이성적 판단을 하여 타국에 대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남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정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합리화하여 주장하였으며 특히,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써 선제적 핵무기 사용이 없을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민족내부의 문제에 끼어들고 있으며 남북 간의 대결을 조장하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마치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제시하여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이후로 미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2013년 3월 8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강표영의 발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미 타격 목표를 확정한 대북간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은 경량화, 소형화되고 다중화된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성탄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⁶⁵⁾ 또한 “제주도 한라산에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는 것을 맹세한다”고 언급하며 조국통일 위협을 앞당기겠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이러한 공세적인 핵전쟁 위협을 제기함으로써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도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2016년 6월 2일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위협이 크다는 발언을 하였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마이크 펠린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⁶⁶⁾

64) 『노동신문』, 2016. 6. 11.

65) 『연합뉴스』, 2016. 3. 10.

66) 『연합뉴스』, 2016. 6. 3.

2. 평화보장의 선차적 확보

북한은 평화보장을 추진해왔다. 이는 체제생존을 위한 안보보장을 위한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평화협정 당사자는 미국으로 전환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평화 수호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8월 15일 노동신문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의 근원을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평화수호선언”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10.4 선언을 통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방도가 제시되게 되었다.”⁶⁷⁾

북한의 평화보장 강조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북한의 체제생존을 위한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논의는 195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도까지는 남한과 북한 간의 협정 체결로 추진되었다. 남한과 북한이 주요 당사자였을 당시 의제는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남북한 군축 및 평화협정체결이었다. 1972년 김일성은 남한과 북한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 남북한이 군축에 들어가자는 평화 제의를 하였다.⁶⁸⁾ 이때까지 남북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남북간 무력행사 불사용 추진이라는 의미였다.⁶⁹⁾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의 상대자를 남한에서 미국으로 전환하였다. 1977년 신년사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미 간 양자회담 개최 및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의 추진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 제의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가 주목적이다.

이러한 평화협정 체결은 통일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평가되었다. 1988년에 제시된 ‘평화보장 4원칙’에 따르면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통일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통일과 평화를 분리하여 평화를 당면 정책과제로 더 우선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67) 『로동신문』 2014. 3. 1.

68) “요미우리신문 기자와의 회견”, 『조선중앙통신』 1972. 1. 10.

69) 고유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기 북미협정” 광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p. 64.

높다.70) 이러한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는 통일개념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추진해왔으며, 오히려 통일논의보다 비중이 상승되어 왔다.71)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김정은 정권 역시 미국에 대해 체제보장을 약속받고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북한은 2016년 이후로 통일을 이룩하는 조건으로 평화보장을 추가하였다. 북한은 2016년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조건”으로 제시하였다. 2016년 이전까지는 평화보장에 대해 “온 민족이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보장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시하였으며72) 이와 더불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로 언급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평화보장에 대해 통일방안과 분리하여 하위개념으로 둔 것이다. 2016년 이후 평화보장과 연방제통일안을 병렬로 둔 것은 북한의 보다 공세적인 평화보장 요구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새로운 통일방침으로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보장과 연방제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을 들어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을 통합한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정권에 있어 평화보장이 매우 사활적인 사안이고 최종 목표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평화보장이 통일의 하위 개념에서 분리되어 독자적 영역에서 추진되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평화보장과 통일방안을 통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통일방침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5장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의 운용 방향

본 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전략 수단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통일논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북한의 통일논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통일전략 추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조율이란 김정은 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의 기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살펴

70) 서보혁, “북한의 평화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13권 1호, (2009) pp. 72-73.

71) 위의 논문, p. 76.

72) 『로동신문』 2013년 1월 12일.

보는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수단을 변경하게 되며,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의 연속에서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현실인식과 전략을 구상하는 시기에 도래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당면 목표는 대내외에 ‘체제 생존’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 목표 위에 정권 지속이라는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에 대해서도 일단 큰 그림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7차 당대회까지의 김정은 정권이 내놓는 공식담론은 크게는 변화 없는 이전 정권의 연술 반복이지만 작게는 이러한 움직임의 연속이었다.

2012년부터 통일과 관련된 북한의 논조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통일전략에서의 주도권과 자신감의 확대이다. 2013년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2014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 전략적 준비기(2012년-2013년)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하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핵 실험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2013년 6월에는 국방위원회 중대 담화를 통해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주장하며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북한은 2013년까지는 통일에 대해 전쟁 위협을 나타냈으며, 핵을 중심으로 한 통일에 대한 공세성과 적극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 논조에서 2012년 중반부터 2013년까지 이례적으로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제가 언급된 기사는 11건에 불과했다.

<표 5-1> 통일관련 노동신문 주요 기사(2012-2013년)

일자	제목
2012.1.5.	괴뢰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반민족적죄악의 진상을 폭로한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상보
2012.1.18.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영원한 선군태양, 민족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온 겨레와 함께 계신다. - 조국통일연구원 공보
2012.1.20.	파렴치한 거짓말로 민심을 우롱한 시정배들의 죄악: 공동선언도 흥정물로 삼은 반역의 무리
2012.1.21.	ooo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교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 보고서
2012.2.8.	련방제통일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
2012.2.10.	불한당들의 가소로운 대화타령
2012.2.16.	조선반도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을 위한 불멸의 공헌
2012.2.20.	조선반도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루
2012.4.23.	대결광신자들의 종착점은 중국적과멸
2013.3.7.	조선의 핵억제력은 자위를 위한 조치 -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전략위원회 서기장 담화 발표
2013.10.31.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안 - 남녘겨레들 높이 칭송

대신 ‘조국통일대전’에 대한 언급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2년 초반만 하더라도 통일대전에 대한 언급은 단 두 건에서만 등장하였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까지 ‘조국통일대전’의 위협은 280건 이상 등장하여 상당히 확대되었다.⁷³⁾

김정은 정권에서 대내외에 통일방안의 언급 대신 통일대전의 위협을 주장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핵을 통한 전략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속되는 핵개발과 핵을 통한 전략에서 향후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의 전략 목표와 수단은 상대방(적)이 정권 초기의 불안정성을 틈타지 않고 향후 주도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운용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전쟁접경의 순간을 강조함으로써 위협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인들과 인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전쟁과 폭력의 감정을 통해 희생과 노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내적인 자원의 활용 능력을 확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이후에 들어 핵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적극적 통일전략 운용이 나타난다.

73) 이러한 수치는 빈도수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

제2절 적극적 전략 운용(2014년 이후)

2014년 이후 김정은 정권의 통일논조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논의에 대한 확대가 두드러진다.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아래의 표는 “연방제”를 포함한 로동신문 기사이다.

<표 5-2> 2014년 통일 관련 노동신문 주요 기사

일자	제목
3.1.	북남공동선언리행은 평화보장의 기본방도
4.3.	핵포기 망상, 체제대결광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4.24.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4.29	숭고한 조국통일의지로 한생을 불태우시며 체제대결, 전쟁을 바라는가
5.15.	체제통일 망상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다.
6.8.	통일의 보자기로 감싼 체제대결, 북침전쟁론
6.23.	반통일세력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에 철추를 내리시여
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명 백두산 절세위인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민족사적대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8.4.	자주통일을 추동하는 위대한 사상리론적 지침
8.12.	불순한 체제통일야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9.29.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10.6.	연방제통일을 위한 길에 빛나는 불멸의 민족사적 업적
10.11.	고려민주연방제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10.14.	북남선언들의 리행은 시대의 요구, 거래의 지향 남조선주둔 미군은 조선통일의 주요장애물
10.15.	조선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
11.8.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 마련되던 나날을 더듬어
12.13.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12.16.	제 처지도 모르는 자들의 헛된 망상

<표 5-3> 2015년 통일 관련 노동신문 주요 기사

일자	제목
1.7.	우리의 통일헌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1.10.	체제대결,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1.14.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따라야 한다
	조국통일의 대강 불변의 원칙
	미국은 조국통일의 악랄한 훼방군
6.3.	체제대결망동이 빚어낸 극도의 불신과 긴장
6.15.	겨레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된 6.15통일시대
6.16.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6.20.	공동선언에 대한 립장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6.23.	분렬주의세력에 내리신 준엄한 철추
6.29.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야망을 버려야 한다
7.9.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 나가자 -조국통일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발표
8.4.	온 겨레를 조국통일유훈관철에로 부르는 불멸의 기치
8.10.	체제통일은 대결광신자들의 허황한 망상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조국해방과 나라의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민족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9.15.	외세의존이 아니라 자주의 립장에 서야 한다.
10.2.	성과를 이룩하며 전진하는 평화협상
10.11.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
10.14.	런방체통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10월에 대한 생각
11.3.	통일국가건설의 위황한 설계도
11.17.	체제통일 야망을 드러낸 교과서 국정화 소동
11.24.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 조국통일투쟁이 우리도 한몫
12.4.	체제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12.13.	북남관계에 립하는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12.27.	스스로 드러내놓은 동족대결의 흉심

‘통일대전’의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내용만을 내세우는 대신 김정은 정권은 ‘비평화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방법의 기존 틀에 맞게 구색을 맞추어 통일대전을 통일의 한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동족의 선의에 계속 대결로 었서며 평화적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차던진다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천만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⁷⁴⁾

김정은 정권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4년도에 나타난 연방연합제를 제시하고 연방제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면서, 이후로 2016년도에는 핵 지위를 언급하며 통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핵을 중심으로 한 공세성의 강화와 북한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5년 북한 유엔대표부는 뉴욕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세계 비핵화 없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⁷⁵⁾ 이는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화 유훈 관철을 포기한 것이며 이후로 북한의 주요 논조가 되었다. 2016년 4월에는 “미국을 비롯한 핵대국들이 핵군축협상을 통해 세계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근절하고 백악관이 조미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하늘땅이 뒤집힌대도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⁷⁶⁾ 2016년 4월 12일 북한 외무성은 “우리 핵문제는 이미 대화타자를 떠난지 오래”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병진로선은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단 하루도 멈춤이 없이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 ‘주체탄’과 ‘통일탄’이라고 언급하며 ‘주체의 핵보검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⁷⁷⁾ 북한의 통일 전략이 상당히 공세화되어가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2016년 4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가 보유한 핵무기의 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전쟁을 억제하는 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면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의 정당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훼손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우리의 핵보유는 무슨 위협이 아니라 미국이 몰아오는 핵 참화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북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전후로 이러한 태세는 더욱 확고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제국주의 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했다고

74) 『노동신문』, 2016. 5. 17.

75) 『연합뉴스』, 2015. 4. 1.

76) 『조선중앙통신』, 2016. 4. 4.

77) 북한이 “주체의 핵보검과 통일탄”을 언급한 것은 2016년 3월 9일과 16일의 노동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장하면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황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는 것으로 언급되었다.⁷⁸⁾ 당 대회 결정서에서는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사활적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공업부문에서 병진노선의 요구에 맞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동방의 핵대국”이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로 인해 새로운 지위에 도달하였음을 선전하였다. 더욱이 “2016년 수소탄 시험은 1950년에 시작된 전쟁의 계속”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력 증강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전쟁 종결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⁷⁹⁾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전략적 수단인 핵무기와 이를 통한 전략 운용의 변화는 여실히 나타난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이 발표되었고 당대회 이후 통일 담화가 확대되었다. 당 대회 마지막 날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 결정서’가 채택되었는데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앞당겨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⁸⁰⁾ 이후 다양한 계층과 조직에서 통일 관련 담화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표는 제7차 당대회 이후 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김정은이 새로 제시한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담화는 김정은이 제시한 새로운 통일노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면서 남한의 계층까지 아울러 힘을 합치겠다는 투쟁적 다짐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6년 5월 26일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이 발표한 담화’에서는 “남조선의 천도교들을 비롯한 정당, 단체들과의 접촉과 래왕, 련대연합을 강화하며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한다.⁸¹⁾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담화’에서는 “남조선의 노동자들 또는 남녘의 근로대중”과 함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민중의 선봉대, 만아들”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⁸²⁾ 김정은 정권은 이처럼 2014년 이후 핵전략을 지속하면서 통일

78) 북한은 2016년 9월 9일 노동신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79) 『조선신보』, 2016. 1. 17.

80)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로동신문』, 2016. 5. 9.

81) “경애하는 원수님을 통일의 령수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로동신문』, 2016.5.16.

82) “위대한 통일대강은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의 궤도따라 힘차게 전진하자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로동신문』, 2016.5.27.

논조의 구체화와 공세성, 적극성을 확대하였다.

<표 5-4> 제7차 당대회 이후 각계각층의 담화 발표 목록

일자	제 목
2016.5.14.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한다.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성명 발표
2016.5.22.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의 담화 절세위인의 통일대강을 받들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총매진할 것이다 -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2016.5.23.	조국땅위에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애국성전에 이바지해나갈 것이다. -총련본부 위원장들 담화 발표
2016.5.24.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 나가겠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북남, 해외의 광범한 애국력량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 최진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담화
2016.5.25.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은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고무적 기치이다. - 강련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담화 불멸의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담화
2016.5.26.	경애하는 원수님을 통일의 령수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류미영 천도교천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6.5.27.	위대한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의 궤도따라 힘차게 전진하자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6.5.28.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6.5.29.	통일애국의 필봉을 높이 들고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힘있게 고무추동해나갈 것이다 - 차승수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6.5.30.	삼천리강토위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힘있게 떨쳐나가자 - 김정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6.6.3.	조국통일대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이다. -총련의 중앙단체 책임일군들이 강조
2016.6.10.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석회의 진행
2016.6.17.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기위한 투쟁에로 부르는 애국애족의 호소를 열렬히 지지한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제3절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전망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일정한 변화를 꾀해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전략과 목표, 혁명전략 및 대남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보는 시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전략이란 인식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는다. 아래의 표는 인식의 수준과 전략적 조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5> 전략의 운용 유형: 앙드레 보프의 조율

번호	내용
1	최종목적의 타당성이 제한되거나 수단이 충분한 경우 - 가용수단이 충분한 경우, 위협이 미약하다거나 규모가 작은 국가(또는 조직)을 상대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렵지 않다. 최종목적 달성이 제한된다는 의미는 강대국이 핵무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해서 최종 목적을 적 국가나 조직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최종목적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 ‘최종목적’은 단순히 ‘전쟁억지’일 수 있다.
2	최종목적 달성 및 수단이 동시에 제한되는 경우 -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없다. 같은 논리로 수단이 제한되는 적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실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수단을 가용하기 전까지는 최종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
3	최종목적에 존망에 결정적이면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경우 - 약소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이다. 대칭적인 군사력이 열세하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비대칭수단의 우위를 통해 최종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4	최종목적 달성이란 범위 설정이 넓으면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경우 - 미국의 독립전쟁, 마오쩌둥의 공산혁명 등의 경우를 의미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범위는 넓으나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된다. 장시간의 투쟁으로 동기가 희석되거나 조직의 단결이 와해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이러한 경우 최종목적의 개념을 확대하여 절박한 상황에서 생취한 낮은 수준의 성공을 최종목적과 연계할 수 있다.
5	최종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가용수단이 충분한 경우 -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경우를 의미한다. 강대국은 자산의 의지대로 약소국을 움직일 수 있다.

출처: 김훈상, 『Ends, Ways, Means 패러다임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지식과감성, 2012), p. 99
를 요약하여 요약하여 재인용

북한의 인식은 두 번째 인식과 네 번째 인식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도의 통일이라는 최종목적은 체제 생존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면서

가용수단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통일이라는 최종목적의 개념을 확대하여 6.15 공동선언 등 합의 이행이나 주한미군 철수 및 평화보장의 추진 등 낮은 수준의 성공을 최종목적과 연계해 왔다.

김정일 정권 시기가 상당히 수세적이었다고 한다면, 북한의 최종목적이 적화통일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된 가용수단으로 인해 획기적인 수단을 가용하기까지 최종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현실인식은 세 번째 인식에 제일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에서 남한의 제도통일,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는 확대되었다. 미국에게 핵위협을 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 배제와 안전보장, 이후 대남적화통일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준망이 걸린 최종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및 우리의 대응책

우리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이 통일을 포기하고 분리공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통일전략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북한의 평양시가를 표준시 채택하여 남한과 시차를 둔 것, 최근 북한이 남한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 등 단편적인 내용이다. 북한의 역량 약화와 더불어 북한의 통일전략이 분단국 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으로 변모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⁸³⁾

이러한 경향은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의 통일환경이 악화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정권 시기의 상당히 수세적이고 소극화 된 북한의 통일 논조와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3대통일역량⁸⁴⁾을 중심으로 적화통일 추진 능력이 여러 방향으로 쇠퇴하고 적화통일을 제기하는 담론보다는 민족공조론이 대두되면서 북한의 전략이 ‘공존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⁸⁵⁾ 이와 같이

83) 김근식,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신혼과 파경을 지나 중년부부로” *Future Horizon* (2016) pp. 20-25.

84) 북한의 3대혁명역량이란 북한의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국제적 혁명역량의 세 가지 차원을 의미한다. 탈냉전 이후 북한의 북한 내부 혁명역량과 더불어 국제혁명역량과 남한 혁명역량이 상당히 쇠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85)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배영애,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통일전략』 제7권 q호 (2007), pp. 289-320; 최완규 이수훈, “김정을 정권의 통일정책” 『통일문제연구』 통권 236호 (2000) pp. 163-170; 고병철, “북한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계간사상』 1991년 봄호, (1991) p. 106; 북한에서 민족을 우선한 담론의 확대에 대

북한의 쇠퇴된 통일 및 혁명 역량과 북한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 및 남한으로의 일방적 흡수통일의 가능성과 북한의 우려를 강조하는 우리사회 인식은 북한 정권의 통일전략에 관한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었다.⁸⁶⁾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의 통일논조를 들여다보면 정권이 점차 안정화되고 핵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면서 통일논조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 정권과 비교하여 상당한 양의 담론을 쏟아내며 북한 주도적 통일에 공세성과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구체화한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은 크게 변함없다. 제시된 통일노선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1980년대 수정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또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며 이에 대해 제시된 김정은 시대의 투쟁방침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 및 연방제 통일’이다. 이러한 내용은 1980년대 이후의 반복에 불과하다.⁸⁷⁾

이러한 지속성과 함께 북한의 통일논조에서는 통일추진과 통일논의에 대한 적극성이다. 김정일이 통일 논의에 소극적이고 반면에 민족담론을 확대한 것과 달리, 김정은은 통일방안의 새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연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성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주체적 통일방안’에 대한 투쟁적 실천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남한의 계층까지 포괄하여 투쟁 담화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다. 민족을 강조하는 담론에서도 핵을 보유하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지위와 자주성이 새롭게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과 핵을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이 확고해지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핵’이라는 자산이 공고화됨으로써 이것이 통일전략의 다른 자산과 전략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핵을 중심으로 한 자산의 운용은 북한의 통일 최종목적을 대남적화통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박영자, “김정일 시대 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2010), pp. 216-240.

86) 이정철, “북한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경제확장전략: 핵-경제 병진노선의 역조합” 『사회과학논총』 제 18집 (2015), pp. 29-33. 그럼에도 저자는 북한이 상당히 공세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87) 통일연구원, “제13차 KINU 통일포럼”, 『통일연구원 통일포럼』 16-02(2016), p. 50.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에 맞추어 통일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한 가용수단의 운용이 저지될 수 있도록 핵포기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지속하는 한 고립과 제재가 현실임을 깨닫도록 하고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통일전략을 추진하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가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2. 북한의 통일전략과 하위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은 대남통일정책에 대해 대전략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대북통일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은 핵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적 지위에서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남통일정책의 추진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태도에 대해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 통일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는 태도 변화가 있다면 북한이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남북 교류 확대와 한반도 평화협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3. 북한의 통일정책 방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통일정책에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통일노선이 김일성 김정일을 계승하는 ‘주체적 통일노선’임을 강조하면서도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향후 더욱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사상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주도권이 북한 세습정권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통일’을 주축으로 새로운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적 정당성을 확고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발표 내용에는 실제 의도와 숨겨진 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제시하는 대남 통일담론을 통해 북한의 대남메시지와 정권 정당성 강화를 위한 메시지 등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대북통일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은 ‘연방제’만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력통일 방법인 핵전쟁 위협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의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내지 경계심에서 기인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각종 도발 및 핵전쟁의 강력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

집권 5년이 지난 김정은 정권은 중반기에 통일대전의 위협적 언급을 상당히 확대하였고 그 이후로는 비평화적 통일방법을 제기하며 무력통일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통일대전’을 강조하면서 군인들의 전쟁 역량 구축과 실질적 타격 능력 확대를 도모하였고 최고사령관, 즉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 시기 대남 도발 감행의 요인으로 남한의 흡수통일 또는 제도통일 위협, 즉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또한 북한이 한국의 통일정책에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판을 제기하며 언제든지 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경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선전을 통한 통일전선 전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은 핵보유국 지위를 통한 통일전선전술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내세우며 민족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며 선전하고 있다. 또한 핵을 ‘민족 공동의 재부’로 정당화하며 제시하고 있다. 핵을 가진 강대국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통일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핵전쟁의 참화를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남한 사회에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동경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어 경계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남한에서의 핵보유 주장 등 한미관계에 균열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곽태환,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97.
- 김명기, 『남북한 연방제통일론』, 서울: 탐구당, 1994.
- _____, 『남북한 통일정책』,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5.
- 김훈상, 『Ends, Ways, Means 패러다임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지식과감성, 2012.
- 로렌스 프리드먼, 『전략의 역사 1』,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4)
-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통일외교』, 서울: 명인문화사, 2006.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북한의 국가전략』, 서울: 한웅아카데미, 2003.
-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정준호, 『국가유형별 안보론적 해석에 관하여』, 서울: 국방대학원, 1990

나. 연구논문 등

- 고병철, “한국의 통일전략은 변하고 있는가”, 『계간 사상』 제3권 제1호(사회과학원, 1991).
- 고유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기 북미협정” 곽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 곽승지,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 우승지 편저, 『김정은 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 김근식,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신희과 중년을 지나 중년부부로”, 『Future Horizon』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 박형중, “김정은 정권의 핵 및 대남 정책방향 진단”, 『전략연구』 통권 제6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 배영애, “탈냉전기 이후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변화 분석”, 『통일전략』 제7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7).
- 서보혁,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9).
- 오경섭,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분석(3): 통일전략과 남북관계.” 통일 연구원

- 온라인 시리즈 16-14, 2016.5.13.
- 오성호, “북한문학의 민족주의적 성격 연구: 민족해방서사의 주인공과 그 변모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55호, (배달말학회, 2014).
- 우철구,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와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0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4).
- 유지훈, “분단시대 동독의 통일정책”,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 전영선, “북한 아리랑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그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1호 (북한대학원 대학교, 2011).
- 정동규, “9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향과 전망』 통권 17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992).
- 정성윤, “북한 화전양면전략의 특징과 전망”, 『전략연구』 통권 제54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
- 정영철, “김정일 시대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2)
- 정영태, “북한의 국가전략과 핵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20주년 기념논문집』, (2007)
- 최완규·이수훈, “김정일 정권의 통일정책: 지속성과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5호 (평화문제연구소, 2001).
- 황병덕, “동독의 대서독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의 비교분석”, 『통일정책연구』 제7권 1호, (통일연구원, 1998)

다. 언론

- 『한겨레』, 2016년 1월 7일, 김보근, “Korea를 Corea로 북, 국가 영문명 바꾸나”.
- 『월간조선』, 2015년 10월호, 배진영, “김정은, ‘두 개의 독일’ 지향했던 ‘호네커’ 닮아가는 듯: 강인덕 장관이 말하는 8.25합의와 남북관계”.
- 『데일리NK』

2. 북한문헌

가. 단행본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나. 연구논문

다. 언론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3. 외국문헌

가. 연구논문

David Jablonsky, “National Power” in Joseph Cerami and James Halcomn (Ed.) *The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National Security* (4ed.) Vol. 1: Theory of War and Strategy, (New York: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0)

US Marine Corps, “Strategy: Ends and Means”, *Marine Corps Doctrinal Publication*, Vol. 1-1 (1997).